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 수립

2002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5월 31일 7시 30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위원장인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2003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동 계획(안)의 기획예산처 제출후에 기금관리비 등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으며, 『2001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보고서』를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처로 제출되어 협의·조정을 거친 후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금년 12월 경에 최종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

- 수입은 신규조성액 22조 1508억원과 투자원금회수금 20조 6766억원을 포함하여 총 42조 8274억원으로서 연금급여 등에 2조 6737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여유자금 39조 9589억원은 주식 직·간접투자에 4조원(10.0%),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에 7000억원(1.8%), 채권 및 금융상품에 35조 2589억원(88.2%)을 각각 배분하며, 2003년도 말 기준으로 109조원의 기금이 적립될 전망이다.
- 대체투자는 벤처, 사모증권(Private Equity), SOC투자 등 주식, 채권 등 전통상품 대체가능 상품을 총칭함.

-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수립시기가 예년보다 3달 여정도 앞당겨짐에 따라, 가정변수인 금리, 물가, 주가상승률 등 내년도 경제전망치가 재조정되면 동 운용계획(안)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을 것임.
- 위원회에 보고된 2001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작년도에 총 수익률 8.99%로 6조 550억원의 수익금을 기록하였으며, 공공부문 6.62%, 복지부문 8.05%의 다소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에서 주식 36.86%, 실적상품 37.94% 등 평균 11.37%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여 2000년도 대비 6.68% 포인트 상승하였음.
-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에서는 자산배분전략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주식투자전략의 장기비전 마련, 운용자료의 정확한 관리방안 수립 등을 요구하였으며, 자산배분방식을 현재의 절대금액 기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배분비율 기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좀더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등 기금운용관련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검토·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발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각종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2001년 주요현황을 발표하였다. 2001년도 수급자 주요 특성분석에 있어서 분석기준월은 2001년 11월이다.

- 주요특성별 수급자 현황(70만 7천가구, 144만 2천명)
 - 수급자 유형: 일반수급자 137만명, 시설수급자 7만명
 - ※ 이하 일반수급자 137만명 기준으로 분석
 - 근로능력 유무: 근로능력자 35만명(25%), 근로무능력자 102만명(75%)
 - 연령별 현황: 18세 미만 34만명(25%), 18~60세 63만명(46%), 61세 이상 40만명(29%)

- 수급자 가구의 소득·재산현황(71만가구 분석)

- 가구소득: 30만원 이하 49만(69%), 30만원 초과 22만(31%)
- 가구재산: 1천만원 이하 54만(76%), 1~2천만원 10만(14%), 2천만원~7만(10%)

민간사회복지사에게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 부여'

국가의 보호정책이 미치지 못한 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국가의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사회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사업수행 중 알게된 저소득 가구를 시·군·구에 보호 의뢰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생계급여의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사가 연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호의뢰를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반드시 직접 조사해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보호를 의뢰한 민간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민·관 연계 보호체계」가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 저소득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 가사, 목욕서비스 등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 시설의 사회복지사에게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게 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업무가 종전의 공공기관 보호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보호체제로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활의지 키우는 재활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자리 제공에 앞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할 10개 기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10개의 기관이 추가로 선정되면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은 기존 34개소에서 44개 기관으로 확대되게 됨. 특히 금번에는 자활사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자활대상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이 선정되었음.
-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은 읍·면·동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직업활동·사회심리적 상담 등 통합적인 전문치료서비스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며, 예방차원의 근로의욕고취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임.

아동학대 사례현황

수집된 자료는 1391신고 접수 및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사례개입, 아동학대 사례유형, 서비스 제공 및 홍보, 교육사업 등 22개의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정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1년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수는 총 4,133건이었으며, 그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606건(63.1%), 일반상담 건수는 1,527건(36.9%)이었음.
- 아동학대 신고자는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26%, 비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74%로 나타났음.
 -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인(2.0%), 교사(5.0%), 관련공무원(8.0%), 시설종사자(11.0%) 등이었음.
 - 비신고의무자들 중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부모'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웃·친구가 685건(26.0%), 친인척 241건(9.0%) 등이었음.



- 신고 접수된 사례에 대한 상담원들의 현장조사 결과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 총 2,606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가 80.8%(2,105건), 무혐의 12.0%(313건), 부적절이 7.2%(188건)이었음.
- 아동학대사례중 방임이 31.9%, 중박학대 29.6%, 신체학대 22.6%, 유기 6.4%, 정서학대 5.4%, 성 학대 4.1%로 각각 나타났음. 중박학대 중에서는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음.
 - 참고로, 미국 아동보호전문센터에 2000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62%가 방임 사례, 19%가 신체학대, 10%가 성 학대, 8%가 정서학대임.
- 학대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방임중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기간 위험한 상태에 내버려둔 물리적 방임이 53.1%이고, 교육적 환경이나 의무 교육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이 26.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음이 10.6%인 것으로 나타남.
 - 신체학대중 멍든 것이 57.7%이고, 그 외 목 조름, 뇌손상 및 두개골절과 혈종, 화상, 던짐,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 등이 포함.
 - 정서학대 유형으로는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 32.3%로 가장 높았고, 소리지름 30.9%, 내쫓거나 죽이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10.7% 있었음.
 - 성 학대 유형에 있어서는 성추행이 61.2%, 성기삽입이 21.7%이고 그 외에 구강성교, 포르노그라피, 성관계 노출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아동학대 발생장소에 대해서는 가정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80.0%로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가정이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 외에도 유아교육기관 2.3%, 길가 등 집 근처 2%, 친척집, 이웃집이 각각 1.5%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은 비슷하였고, 연령 분석결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들이 학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2,105건 중 9~11세 23.7%, 12~14세 20.8%, 6~8세 18.4%, 3~5세 13.5% 등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편부모가정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42.0%로 일반가정(25%)보다 높아 결손가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01년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7명이었고, 사망원인으로는 폭력 및 구타, 태아 알코올증후군, 의료적 방임 등이었음.
- 2,105건 중 피해아동이 원가정보호 조치된 경우는 53.0%,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입소된 경우는 18.0%, 일시보호 15%, 친인척 보호 7.0%임.
 - 이는 피해아동의 절반정도가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원가정에서 그대로 보호된 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학대행위자의 교육 및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재학대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론임.
-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64.1%, 여자가 35.4%로 남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30~40대가 68.8%를 차지함.
- 학대행위자 직업으로는 무직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주부가 13.9%, 단순노무직이 13.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에 의한 학대발생건수가 88.0%로 대부분을 차지, 그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80.0%. 특히 친부가 친모보다 2배 이상 학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그 외에도 조부모와 친인척 5.3%, 동거인 0.7%, 교사 2.4, 이웃 1.9%, 기타가 3.1%임.
-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이 34.6%로 나타나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그밖에 성격문제 13.7%, 알코올남용 11.3%, 부부갈등 9.9%, 배우자폭력이 6.1%로 나타나 학대자들이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나 배우자 폭력 또한 학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조치결과로는 상담이 74.8%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학대정도가 심해 처벌되어야 할 사례들 가운데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가 4.4%(91건)이었던 바, 고소·고발중인 사례가 60건, 구속 25건, 불구속 6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는 비교적 많지 않음.

조직이식재 관리 위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그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미비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인체조직이식재를 현행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였다.

인체조직이식재는 사람의 뼈, 연골, 피부, 인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적 손상부위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인체조직공학 기술의 발달로 그 수요가 증가하여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법령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6월부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오는 6월부터 전국 637개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6월부터 「조건부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의 안전을 특별관리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이 조건부 신고를 할 경우 3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하는 조건부 신고제도를 실시함.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자격취득 비용, 시설 개보수비,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양성화가 이뤄질 계획임.
- 시설 신고를 위한 설비·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에 따른 진입장벽을 완화함.
-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보험료 등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비닐하우스 등 생활자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임대해 주고 이의 이전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

하고, 시·군·구에는 미신고 복지시설 전담직원을 지정하기로 함.

OECD 정책권고사항 향후 추진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5월 21일 오후 4시에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OECD 정책권고사항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 OECD 평가내용과 정책권고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관련협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향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하며, 관련 전문기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권고사항에 대해 우리실정에 맞게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16개 정책권고사항에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의료기관 공급자의 수입 등에 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부문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간본인부담 상한선 도입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보험료율 인상 ▲보험재정 지출 목표제 도입 ▲행위별 수가제 개편 등을 포함하고 있음.